

농어촌 감소 의석 9석→5석 안팎 의견 접근

획정위 수도권 '분구' 억제해 농어촌에 배분

정개특위 오늘 기준 논의...의원정수 확대 가능성도

내년 4월 총선의 지역구 획정 작업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논란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획정위는 농어촌에서 감소할 의석수를 기존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 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서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그만큼 통폐합 대상 농어촌 지역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일 획정위에서는 분할 원칙 예외 조항 등으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6시 전체회의를 개최,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이끌어낼 획정기준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구 산정방식 및 분할금지 원칙 예외 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도 이날 접촉을 갖고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복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검토 중인 '인구·상한선 인구 산정방식 변경 및 '자치구' 수 최소화' 등으로 보인다.

야당 제안을 토대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오는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리먼더리' (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여전히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고 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는 최소한 유지하고 의원정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자며 '다른 해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의원정수 확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해당 의원의 지역구민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농어촌과 지방을 배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지도체제 개편' 설전 가열

박지원 "통합전대·조기선대위 바람직" ...주류 "대안 없는 주장"

문재인 대표 등 주류를 향한 비주류 진영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립 성향 중진급 인사들의 모임인 '통합행동'은 6일 당내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표가 '새 정당 구상'을 조기에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수도권 및 공천권을 둘러싼 정파 간 이해를 초월한 연대와 통합을 촉구한다"며 "문 대표는 통합을 위한 구상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통합행동이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문 대표의 통합 구상 발표를 우선 요구했지만 결국 '통합 전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을 크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통합 전대와 조기 선대위 구성 등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통합·단결의 방법으로 통합전당대회, 비상대책위원회, 조기선대위구성위원회 구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가지 안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합전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볼 때 총선이 6개월 남았다. 총선이 기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 전대나 통합 정당이 신당 추진 세력이 참여할 지는 확실치 않다"며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총선을 치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의 거취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목표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로 가야 된다"며 "현재처럼 당이 어려울 때는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어거전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류 측의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TBS 라디오에 출연, "낯은 축음기를 틀어대듯 정치적 이해타산에 입각한 주장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며 "(통합전

대, 조기전대, 조기 선대위 구성 등은) 명확한 이유와 대안 제시 없이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류 진영에서는 통합의 균형자 역할을 자임한 통합행동의 '새 정당 구상' 요구에 대해서는 경청하겠다는 태도 속에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각각의 비주류 진영에 대해 분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미나 참석 김무성 "목타네" 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김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정책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김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국감 인물

"혁신도시 클러스터 무분별 상가 조성" 지적 광주송정역 시설 개선 국토부 약속 받아내

천정배 무소속 의원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일반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공 시설 차별화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데 이어 기업형 임대

신당 창당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야권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서구 을)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5선 중진의 관록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달 11일 국토부에 대한 1차 국정감사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무분별한 상가 조성 문제를 질타한데 이어 호남권 화물차고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도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17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의 교통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라며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22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송정역 시설 개선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약속을 받아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천 의원은 지난달 18일 한국

주목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 관계자들이 진담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경과 등을 유발하는 기존 댐 방식의 홍수관리에서 탈피, 지하저류시설 건설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22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철도 무선방식이 이원화, 대형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오는 8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의 정부의 SOC 예산 집행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를 통해 증명,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野 56명 대정부 질문자 확정

13~16일 노동 개혁·교과서 국정화 등 충돌 예고

여야는 6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설 질문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오는 13~16일 까지 나흘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모두 56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김성곤·권은희·신정훈 의원 등 4명이 나선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 현안과 주요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자 명단.

▲정치(13일)=이한성·조해진·류지영·김희선·이완영·김태홍·이장우

(이상 새누리당) 백재현·민병두·이찬열·이윤석·이춘석·강동원·전철철(이상 새정치연합)

▲외교·통일·안보(14일)=정두언·양창영·송영근·심윤조·경대수·하태경(이상 새누리당) 김성곤·강철일·최재천·백근기·권은희(이상 새정치연합) 김제남(정의당)

▲경제(15일)=서상기·홍문표·강석호·이현재·이종배·이종훈·이현승·김용남(이상 새누리당) 정세균·김영환·김현미·이원욱·은수미·신정훈·김윤덕·이언주(이상 새정치연합)

▲교육·사회·문화(16일)=노철래·최봉홍·박성호·윤영석·김용남·문대성·강은희(이상 새누리당) 양승조·조경태·유원식·유승희·도종환·윤관석(이상 새정치연합) 서기호(정의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